

국가 연구개발 예산 7% 까지 확대

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낸 과학기술계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질문에 대해 한나라당은 답변서를 통해 “연구개발투자를 GDP대비 3% 이상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예산중 연구개발의 비중을 6%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”이라며 “과학기술자의 사기 앙양과 위상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자 연금제도의 신설과 기술고시의 채용규모 확대방안을 검토하겠다”고 밝혔다.

■ 질문 1

과학기술계는 과학기술을 지원·육성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강력한 실천의지와 노력을 원하고 있습니다. 이를 위한 귀당의 기본정책과 대안은 무엇입니까?

☞ 답변 1

□ 우리 당은 과학기술이 미래사회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확신하며 과학기술을 국가혁신 전략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미래를 준비해나갈 계획임.

□ 미래의 성장동력인 과학기술을 지원하는 업무는 현재 과학기술부를 포함한 정부내 많은 부처(19개 부·처·청)가 수행할 만큼 그 범위가 확대되고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.

○ 이러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과학기술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조직을 전향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.

○ 다만, 과학기술 수석비서관 신설이나 과학기술부 장관의 부총리급 격상문제는 정부조직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나, 어떤 경우에도 그 기능은 강화되어야 할 것임.

과학기술인 국회 비례대표 다각도 검토

□ 범국가적인 과학기술인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를 담당할 전문기능과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.

○ 과학기술인의 국회 비례대표 진출은 현재 사회문제화

되고 있는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과도 관련된 것으로 과학기술관련 정책 수립시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 과학기술계의 충의를 감안하여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음.

■ 질문 2

우리나라 총 연구개발투자에 있어 정부의 분담률은 약 25%로 주요 선진국의 30~40% 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실정입니다.

과학기술 예산의 획기적 증대와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귀당의 대책은 무엇입니까?

☞ 답변 2

□ 과학기술 투자는 미래 국가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요소로 우리 당은 연구개발투자를 GDP대비 3% 이상 과감히 투자해 나갈 것임.

연구개발투자 GDP대비 3% 이상으로

○ 아울러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현재 국가예산대비 4.7%에 머물고 있는 연구개발 예산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적극 동의함.

○ 우리 당은 앞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우선적인 투자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국가 예산중 연구개발 예산의 비중을 6%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며, 추후 국가경제와 재정규모의 여건에 따라서 7%까지도 확대할 수 있으리라 판단함.



지난 7월 4일 오전 10시 김시중 과총회장(왼쪽)이 한나라당 당사를 찾아 이회창 대통령후보(가운데)에게 '우리나라 과학기술 도약을 위한 과학기술계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질의서'를 전달하는 모습.

□ 한정된 연구개발 예산의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적인 연구개발사업의 기획, 예산 사전심의 등 종합조정 역량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봄.

○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배분의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분석비용, 예산 사전조정제도 개선 등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임.

○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, 국과위 전문위원회 소위원회 활성화 등 조직 강화를 지원해 나갈 것임.

○ 이와 함께,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임.

■ 질문 3

현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한 귀 당의 입장과 이를 치유할 근원적 대책은 무엇입니까?

☞ 답변 3

□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우리 경제가 세계 일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·활용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음.

○ 그러나, 최근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자연계열 응시자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청소년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화되어 향후 과학기술 인력 수급 불균형 등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임.

○ 그 원인은, 흥미를 돋우지 못하고 현실성 없는 과학교육, 교차지원 등 입시제도, 그리고 과학기술자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등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,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임.

○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는

- 초·중·고 단계의 체계적인 과학교육 강화 및 청소년 과학활동 지원과 함께,

- 최근 급변하는 과학기술환경에 부응하는

이공계 대학 교육체계 개편 및 대학생 연구능력 배양이 필요함.

- 나아가 과학기술자에 대한 처우개선 등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청소년에게 과학기술자로서의 사회진출 이후에 대한 비전 제시가 강화되어야 할 것임.

□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행정조직의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고 봄.

○ 획일성과 보편성보다는 창의성을 중시하는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해서 과학교육 진흥 및 과학영재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임.

○ 그러나 전담부서의 설치에 정부조직 전체의 틀 속에서 기존조직의 개편 여부를 결정할 때 검토할 수 있을 것임.

이공계의 병역특례제도 개선 필요

□ 청소년들의 이공계 진학 촉진을 위해서는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개선 및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강화가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.

○ 특히, 금번 월드컵 출전 대표선수들에 대하여 병역특례를 인정함으로써 해당 체육분야에 매진할 여건을 조성하고 개인의 중단없는 기량 향상의 기반이 마련된 것과 같이, 효과적인 이공계 인력 양성 및 유치를 위하여는 병역특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.

○ 또한, 우수 이공계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,

- 수학·과학성적이 우수하고 교내의 과학활동이 탁월한 우수고등학생을 선발하여 대통령 장학증서 및 이공계 대학 진학시 상당액의 학비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'대통령 과학 장학생' 제도와,

- 소수 정예 우수 과학분야 학생을 선진 외국의 이공계 대학에 국비로 유학시켜 세계적인 핵심 과학자군으로 양성하기 위한 '해외 이공계 대학 국비 유학제도' 추진도 적극 검토할 필요성 있음.

○ 이를 통하여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, 자연계 진학을 장려함으로써 과학기술 인적기반을 강화하고,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 됨.

■ 질문 4

모방이 아닌 창조력을 바탕으로 한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, 기초과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육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한 귀 당의 정책은 무엇입니까?

☞ 답변 4

□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로 핵심기술의 도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모방기술만으로는 기술혁신의 한계가 있어 원천지식의 자력 개발·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며, 이를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함.

○ 최근 우리나라는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,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임.

- 우리나라 기초연구예산 증가규모를 살펴보면,

- 2000년 6천3백50억원 → 2001년 7천2백88억원 → 2002년 9천4백8억원.

- 주요국의 정부 총 연구개발 예산 대비 기초과학연구 예산 비율은 .

- 한국 19.0%(2002년), 미국 22.9%(2000년), 영국 31.5%(1998년).

○ 앞으로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

- 정부 연구개발 예산중 기초연구 예산 비중을 매년 1% 이상씩 증대하여, 개인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기초연구에서부터 대규모집단 기초연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기초연구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2006년에 25%까지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며,

- 아울러, 산·학 협력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대학에 대한

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,

- 정부투자기관의 연구개발비중 기초연구 투자비중도 확대해 나가도록 권고해 나갈 계획임.

□ 국가의 미래는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양성·배출하는 이공계 대학의 연구역량을 높이고, 창조적 과학기술인재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봄.

○ 우리나라의 경우 양성된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대부분이 대학에 집중되어 있고(박사급 연구인력의 76.2%), 새로운 과학기술인력의 거의 대부분도 국내 이공계 대학에서 배출하고 있으나 선진국과 비교할 때 국내 대학의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환경은 열악한 실정임.

- 우리나라 대학 연구비는 GDP대비 0.28% 수준으로 스웨덴 0.8%, 일본 0.45%, 독일 0.4%로 OECD 국가중 하위의 수준.

○ 박사급 연구인력의 76.2%를 보유한 대학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지원이 필요함.

- 대학의 창의적 연구과제를 경쟁원칙에 따라 확대 지원하고,

- 지역대학의 젊고 유능한 교수와 잠재력이 큰 여성 과학자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확대하며,

- 연구능력이 검증된 기초과학 분야의 우수연구자를 선별 지원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선도과학자를 중점 육성해야함

- 기초과학 선두그룹인 우수연구센터와 지역협력연구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,

- 기초 및 첨단연구에 필수적인 대형 연구시설을 확충하여 공동활용토록 추진,

○ 이와 함께 대학과 산업계간 협동연구를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,

-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산·학·연 협동연구를 장려하고 기획단계에서부터 대학과 산업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며,

- 대학 연구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확대와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.

□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수준은 양적으로 SCI논문 발표편수(세계 14위)나 기초과학 연구투자('00. 12.6%), 인구 만명당 연구인원 수('00. 2백29명) 등 선진국에 비해

부족한 실정임.

○ 기초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와 체계적인 기초 연구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함.

- 정부 연구개발 예산중 기초과학연구 예산을 매년 1% 이상 증대하여 2006년까지 25%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대학 및 기초연구분야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,

- 금년까지 우수연구센터 육성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'03년부터 후속사업으로 대규모 학제간 연구 및 그룹단위 연구를 추진하며,

- 세계수준의 인력 양성과 신산업창출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수학·물리 분야 등 창의적이고 개척적인 과제를 선별 지원해야 함.

○ 지역·학문분야간 기초연구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,

- 지방의 연구기반 및 기초학문 연구의 균형적·안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간 연구정보 공유체제를 구축해야 함.

○ 순수기초학문의 지원 강화 및 기초연구결과의 성과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,

- 순수기초과학 연구를 위한 '선도기초과학연구실(ABRL)', 기초의과대학 육성을 위한 '기초의과대학연구센터(MRC)'를 지원하는 등 소규모 집단 연구를 착수하고,

- 대학 및 연구원의 기초과학 연구성과에 대한 특허출원 및 산업체 이전 등을 통한 산·학·연 교류활동을 강화해야 함.

■ 질문 5

IMF사태 이후 과학기술자의 사기 저하는 매우 심각합니다. 과학기술자의 사기 양양과 사회적 위상 제고를 위한 귀당의 정책은 무엇입니까?

☞ 답변 5

□ '과학기술자 연금제도'의 신설 검토 용의.

과학기술자 연금제도 신설 용의

○ 최근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제적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아울러 직업 안정성이 높은 직종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과학기술자의 사기가 저하되었음.

○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연구원들의 직업 안정성에 근거한 직업 선호도를 고양하기 위해, 연구원의 연금제도 도입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봄.

- 앞으로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분석,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계획임.

□ 산업계 연구개발 담당자들에 대한 과감한 세제혜택 부여에 대한 견해.

○ 현재,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, 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나, 민간의 기술혁신활동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에는 역부족임.

○ 앞으로 민간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에 대한 연구비 지원, 연구활동에 대한 조세 지원 등 각종 지원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임.

-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영리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,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,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금감면 확대, 연구원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등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검토할 것임.

□ 과학기술계 고경력 연구자의 활용정책 방안.

○ 산업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조기에 퇴직하는 우수전문인력이 급격히 증가하게 됨에 따라 고급 전문지식과 경험의 적극적 활용으로 국가의 우수전문인력 유희화 및 사장의 방지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현안이라고 할 수 있음.

○ 이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전문경력인사 활용제도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한 조직 및 예산지원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것임.

- 앞으로는 과학기술계 고급인력의 활용에 역점을 두고,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과학기술계를 우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·추진할 것임.

과학기술자의 복지시설 확대

□ 전체 과학기술인의 사기 양양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.

○ 우리 당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과학기술자들이 국가발전의 핵심주역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연구개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.

- 연구원들의 보수 제고, 연구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등 연구원의 처우를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

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음.

○ 과학기술자들의 후생·복지증진 및 과학문화 창달을 위해 수도권에 과학기술인 문화의 전당을 건설하는 등 과학기술자 복지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,

- 국가적 현안과제인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 촉진과 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학 대중화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음.

○ 이와 함께, 국회 또는 당 차원에서 과학기술정책 개발 및 자문, 관련 입법활동 지원 등을 위해 과학기술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나가겠음.

■ 질문 6

과학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대우의 미흡은 정부부처 인력구성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. 현재 중견 공무원 중에서 이공계 출신은 17%에 불과하여 50% 이상인 주요 선진국은 물론 중국 등 대부분의 비교 대상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. 이에 대한 귀 당의 정책은 무엇입니까?

☞ 답변 6

□ 과학기술 전공자의 공무원 임용 확대 필요성.

○ 21세기 지식기반경제하에서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며, 정부업무도 과학기술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과학기술관련 정부예산도 급증하고 있음. 따라서 정부정책의 수립 및 관리에 과학기술 분야의 기본지식 요구가 확대되고 있어 자연/이공계 대학 전공자의 관리직 공무원 임용 확대가 절실함.

○ 최근 청소년의 이공계 지원 감소, 과학기술자 사기침체 등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공계 전공자의 사회적 역할 제고 및 인식전환이 필요하며, 공공부문 특히 공직분야 인적 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부부문에서의 과학기술인력 활용 확대 제고가 필요함.

○ 이공계 출신자에 대한 우대정책의 채택도 중요하지만 현재 이공계 전공자의 배출인력이 인문·사회계 전공자와 비슷함에도 중간관리직 공무원(5급)으로의 진출기회인 기술고시의 채용규모가 매우 낮으므로 채용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.

○ '최소 임용비율 할당제' 도입 문제는 행정자치부 및 중

양인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각 부처 직무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하여 기술직 공무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도출하고, 이에 따라 기술고시채용의 적정규모 등 인적 소요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할 사안임.

기술고시 채용규모 확대 필요

□ 많은 정부정책을 결정·집행함에 있어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대폭 임용하는 것이 마땅함.

○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로 고위직으로 갈수록 과학기술 관련 공무원의 비율이 매우 낮은 형편임. 그 원인중의 하나가 행정직과 과학기술직의 임용이 모두 가능하도록 한 복수직위제의 운영에 있어 실제로는 행정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, 고위직으로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함.

○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현재의 직군/직렬제도를 변화하는 과학기술 추세에 맞추어 재검토하고, 제도운영에 있어서도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행정에 있어서 과학기술 전문가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 나가겠음.

□ 현행의 고시제도에 대해 암기위주의 시험방식으로 전문성·창의성·유연성 등 능력을 갖춘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선발할 수 없고, 획일적인 시험관리로 부처별·직책별로 요구되는 업무 특성에 적합한 인력충원이 불가능하며, 공무원의 적성이나 특성을 무시하고 고시성적순에 의한 부처배치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.

○ 한편 고시제도는 응시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. 또한 행정자치부도 암기 위주의 고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적인 사고력·판단력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한 바 있음.

○ 그러나 지식정보화시대에 우수한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공직에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현행의 고시제도 위주의 공무원 채용제도를 개선·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.

■ 질문 7

정부출연연구소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미래첨단기술의 산실(産室)이며, 만여명의 고급두뇌와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. 출연연구소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귀 당의 정책 방안은 무엇입니까?

☞ **답변 7**

□ 과학기술계 연구회 체제에 대한 입장.

○ 정부출연(연)의 총리실 이관은 정부부처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경쟁축진을 통한 연구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부문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99년 3월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음.

○ 그러나 출연(연)의 관리·감독체제가 국무총리실과 유관부처로 이원화되면서 당초의 취지가 제대로 살려졌다기 보다는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체계적,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.

- 따라서 현재의 출연(연) 관리체제 문제는 과학기술자, 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하에 연구·검토를 거쳐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.

□ 출연(연)에 안정적 인건비 지원을 위한 정부부담 방안.

○ 출연(연)의 인건비 중 정부부담이 40% 정도에 불과하여 연구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하지 못하는 현행체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봄.

○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,

- 출연(연)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고유기능을 정립하고,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정 인건비 규모를 산정해 이를 정부가 안정적으로 지원하여,

- 출연(연)이 수행하는 연구사업중 정부출연금에 의한 연구와 수탁에 의한 연구를 적절히 조화시켜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성과가 산출되도록 할 것임.

- 출연(연)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인건비의 비율을 최소 50% 이상으로 제고하는 한편, 연구원의 보수도 획기적인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타 부문에 비해 높은 처우를 보장하겠음.

연구원 연금제도 도입·복지향상

□ 출연(연) 연구원의 사기진작 방안.

○ 정부출연(연)의 경쟁적 연구환경 조성 과 경영혁신 등으로 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 분위기가 손상되고,

- 연구원들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었다는 인식으로 인해 자존심 손상과 함께 사기 저하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임.

○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출연(연)이 우리나라 과학

기술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할 것임.

- 먼저 연구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출연(연) 연구원들이 최우선적으로 원하는 '연구원 연금제도'를 도입하고 산업계를 포함하는 모든 과학기술자의 복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·추진해 나가겠음. 또한, 외부 수탁부담을 줄이고, 기관의 고유임무에 부합하는 미래원천 기술 개발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 지원을 확대하겠음.

- 이와 함께 연구원들의 보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고, 연구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획기적인 연구원 처우개선을 통해 연구원이 자긍심을 갖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음.

□ 출연(연)에 교육기능 부여 방안.

○ 출연(연)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현장중심의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육성해 사회에 배출하는 역할도 담당해 왔음.

○ 그 동안 고급인력 양성은 대부분 대학에서 담당해 왔으나 최근 등장하는 다학제적 신생융합기술분야는 기존 교육체계로는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어려움.

○ 반면 출연(연)은 기술변화의 중심에 서서 연구 노하우를 축적해왔으며, 또한 첨단 인력·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고급인력을 육성하는 데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음.

○ 이에 따라 출연(연)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, 연구시설 장비, 건물, 조직 및 수행중인 연구프로젝트 등을 활용한 신생융합부문의 과학기술인력 양성이 이루어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.

■ **질문 8**

세계화·지방화·분권화시대를 맞이하여 귀 당은 정책공약으로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지역발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방 과학기술 혁신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을 갖고 있습니까?

☞ **답변 8**

□ 지방정부의 R&D 예산 확대 및 전문인력 확충.

○ 우리나라 16개 시·도의 총 예산 대비 과학기술 예산은

0.93%로 선진국 지방정부의 5%~10%에 비해 극히 저조.

- 과학기술 전담인력도 지자체당 6.6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순환보직 등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실정.

○ 우리 당은 이렇게 취약한 지방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재정 및 인적 자원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.

□ 권역별 거점대학의 집중육성을 통한 산학협력체제 강화.

○ 지방대학의 우수한 연구자원과 지역의 중점육성산업을 연계하기 위해 9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역협력연구센터(RRC)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(현재 53개 운영중) 지원금액도 증액하여,

- 해당지역의 산·학·연 합동연구에 있어 구심체 역할을 하고,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우수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임.

□ 정부 출연(연) 분소 설치 및 첨단 과학기술단지 활성화.

○ 주요 권역별 첨단 과학기술단지가 지자체의 재정 및 경험부족 등으로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운영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.

※ 과학산업단지 현황 (대덕연구단지 제외)

· 지자체 주도 : 부산, 강릉, 오창, 전주, 제주

· 중앙정부 주도 : 광주(산자부), 오송(복지부)

○ 이러한 첨단 과학기술단지가 본래 취지인 지역혁신시스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,

- 해당지역이 비교우위를 지닐 수 있는 지역특화기술관련 정부출연(연)의 지역 분원 설립도 검토하겠습니다.

- 이는 기투자한 H/W활용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지방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잠재력 확충에 있어 핵심요체라고 생각함.

■ 질문 9

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우리의 과학기술계 또한 많은 것을 준비하고 또한 대비하여야 합니다. 이를 위한 귀 당의 정책방안은 무엇입니까?

☞ 답변 9

□ 그 동안 남북 과학기술협력은 식량 등 북한의 현안문

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공동연구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음.

○ 이는 남북 과학기술협력사업이 전담기관의 설치나 예산 보다는 남북 상호간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(신뢰기반 등)조성이 미흡하기 때문임.

- 따라서, 남북 과학기술교류협력을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상호 신뢰기반을 바탕으로 한 상호 협의채널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,

○ 향후, 남북 과학기술교류협력 채널을 통하여 남북 과학기술협력이 활성화되고 교류·협력 수요가 증가되면,

-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과학기술협력 전문센터 및 국제과학기술교류기금의 설치를 검토해 나가는 한편,

- 남북한 및 중·일 등을 포함하는 범 아시아 과학기술전문센터를 설립해 실질적인 교류·협력을 이룩해 나가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임.

남북 과학기술교류협력 실무협의 설치

□ 남북간 과학기술협력은 가장 비정치적·비이데올로기적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남북한 교류협력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분야로 정책적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임.

○ 그러나 현재 남북간 공식적인 과학기술협력창구가 없어 협력사업 추진에 큰 애로를 겪고 있어 남북과학기술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차원의 협력창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.

○ 남북 과학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안한 기술분야별 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는,

- 우선적으로 남북 과학기술교류협력을 체계적·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로서 「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 실무협의회」를 설치하여 운영하고,

- 중장기적으로 남북간 과학기술협력의 진전 상황에 따라 분야별 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.

□ 오늘날 지구촌 사회에서는 국경을 떠난 상호 협력은 모든 분야에서 중요시되고 있음.

○ 따라서, 해외 동포와 더불어 외국 과학기술자의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임.

○ 국내 과학기술단지 등에 외국의 연구소와 연구대학을 유치하고 외국과 공동연구소 및 기술혁신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 67